

## 시 정 질 문 에 대 한 답 변

### <시민복지국>

장명진 의원

#### □ 질 문

- 약수터 27개소 중 먹는 물 수질기준인 45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11개소 외에는 부적절한데 나쁘다고 게시했는가, 게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시 폐쇄조치할 용의는?

#### □ 답 변

- 우리 시 관내에는 98. 3. 1 현재 산수약수터 등 27개소의 약수터가 있는 바 이들 약수터에 대한 97년도 수질검사 결과 산수약수터, 은행제1약수터, 은행제2약수터, 장수천약수터, 영정천약수터, 도당제2약수터, 성주산제1약수터, 성주산제3약수터, 정명약수터, 송내약수터, 도화약수터, 할미산약수터 등 12개소 약수터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음용수로 부적합하게 됨에 따라 약수터를 일시 폐쇄하고 게시한 후 재검을 의뢰한 결과 음용적합으로 판정되어 동 약수터들을 다시 개방하였음.

당초 수질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음용수로 부적합 결과가 나온 것은 채수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약수터의 음용수는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음용수로서의 적·부 문제가 제반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수시로(월 1회 이상)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김동규 의원

#### □ 질 문

- 국경일 등 현충탑 참배시 실제 참석현황이 30명 내외인데 참석대상을 확대해야 소기의 인원이 참석하게 될 것인 바 시청 공무원 및 교장, 교감 등 참석범위를 확대하여 행사를 거행할 용의는?

#### □ 답 변

- 우리 시에서는 1년에 신년초, 3·1절, 현충일, 광복절, 시민의날 등 5회에 걸쳐 현충탑에서 행사

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충일을 제외한 국경일 등 행사는 부천시외 지도자급인 기관, 단체장 및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90여 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공식행사 없이 현충탑에서 참배만을 하는 실정임.

- 현충탑 참배는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간소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위패를 모신 유족 및 가족들은 수시로 참배하고 있음.
- 일반공무원 및 학교 교장, 교감 등의 초청 확대여부는 다음 행사시 종합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 다만, 현충일 행사시에는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 초청장을 발송하여 순국선열 및 전몰용사의 숭고한 호국정신이 추모 계승될 수 있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음.

#### 류재구 의원

#### □ 질 문

- 경로당이 단순 안식처가 아닌 다양한 복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 □ 답 변

- 우리 시에는 현재 254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10,48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각 경로당 별로 교통정리, 폐자원수집, 노인교실, 어린이놀이터 관리,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휴경기 경작 및 충효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중부노인종합복지회관을 통하여 1일 2시간씩 10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기공체조 외 5개 취미교실 및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여 노인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음.
- 경로당의 다양한 복지기능 역할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노인교실, 문화교실, 주부교실, 청소년교실, 독서실 등이 함께 구비되어야 하므로 경로당 중 시설이 넓고 양호한 곳을 조사,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겠으며
- 또한 경로당 신축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복지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양용석 의원

#### □ 질 문

-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소재 「부천 문화의집」을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개관 이후 현재까지 운영비 및 관리비 지원액은 모두 얼마인가?
- 이용자의 90% 이상이 청소년(초·중생 중심)들이고 부천 인구의 75%가 청소년층인데 문화의 집을 청소년 중심으로 활성화시킬 용의와 개학 후 운영시간의 불일치로 주 이용객이었던 청소년층이 이용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가?
- 또한 이용이 저조한 관람실, 창작실, 개인연습실 등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전국의 15개 문화의집 중 유일하게 부천시만 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른 시·군처럼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문화의집 본래의 취지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 답 변

- 「문화의집」이란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과 모임을 갖고 문화정보를 얻는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도에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소사구 송내동에 「부천 문화의집」을 개관하였음.
- 「부천 문화의집」은 새정부에서 지향하는 「작은정부, 큰 행정 실현」을 위하여 중앙의 업무를 지방으로, 지방의 업무를 민간단체로 이양하는 조직의 축소시책에 부응코자 민간중심으로 활발히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천 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 전국 14개의 문화의집 중 부천을 비롯해 서울 「강서 문화의 집」, 경북 「풍기 문화의집」 등 3개소가 지역 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관련규정을 마련중이며 「온양 문화의집」은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기타 시·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문화의집도 지역 민간단체에 점차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97년 12월 26일 「문화의집」 개관 이래 위탁운영 계약체결이 아직 안 된 상태이므로 운영비 및 관리비의 지원액은 없었으며 공공요금으로 811,59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부천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조성이 되어 있으며 특히 인터넷 부스, CD부스, A/V감상실 등은 청소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천교육청, 부천시학원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초·중·고생들의 학교 개학으로 인해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 운영시간을 동절기에는 19시까지, 하절기에는 20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1시간씩 각각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한편 지역주민, 동호인, 예술인을 중심으로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개인연습실 등을 개방하여 현재까지 10개 단체가 23회를 사용했고 학생 및 지역주민 1일 평균 150여 명이 이용하여 현재 까지 7,213명이 이용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 향후 문화원 및 예총 부천시부와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 각 학교 등과 협의하여 운영의 활성화로 문화의집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임해규 의원

□ 질 문

- IMF 한파에 따른 실업자 대책의 취로사업(공공근로사업) 대상사업을 환경감시, 공공문서 정리,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다양하게 발굴 확대 실시 할 용의는 ?
- 부천시 불량인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
- 부천시에서 조사한 실태는 ?
- 불량인의 선도 및 재화를 위한 수용시설 확보대책은 ?

□ 답 변

- IMF 체제에 따른 저소득주민 및 실직자의 생계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취로구호사업비 60,000천원으로는 98. 3. 16부터 우선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1회 추경에 1,050,000천원의 취로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계속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음.
- 또한 정부예산이 확정(정부추경안 : 전국 300억원) 되는 대로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사업으로는 도서 등 문서정리, 농지대장정리, 산림간벌, 하천관리, 오폐물처리, 폐지류수집 등이 있어 공공이익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인 분야도 대상사업으로 할 계획임.
- 불량인 시설은 97년 6월말 현재 전국에 34개 시설(국공립 1, 사립시설 33)에 10,925명이 수용되어 있고, 경기도에는 동두천시(성경원 288명), 화성군(성혜원 469명), 가평군(꽃동네 440명) 등 3개 시설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원미구 상동 246-40 베네스타의집(비인가시설, 시설장 : 노정자 목사)에서 18여 명의 불량인이 숙식을 하고 있음.
- 불량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부천시에 불량인이 몇 명인지 정확히 조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발생시마다 귀가조치 및 시설 입소를 의뢰하는 실정이며, 97년도의 경우 141명(남 89, 여 52)의 불량인이 발생, 138명을 귀가 조치하고 3명은 시설 입소 의뢰하였음.
- 우리 시에는 소사본동 산 53-1번지(지목 : 묘지, 토지면적 3,732평)에 비닐하우스 약 16평을 축

조하여 전석편 외 13여 명의 부랑인 및 알콜중독자 등이 기거하고 있으며

- 수차에 걸쳐 불법행위 자진원상복구 조치 지시 및 계고하고, 고발까지 한 바 있으나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차후 원상복구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을 실시 축조건물을 철거계획으로 있으며, 부랑인에 대해서는 시설에 입소토록 조치계획임.
- 부랑인의 선도 및 재환을 위한 수용시설의 건립에 대하여는, 부랑인 시설운영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부랑인의 발생추세 등을 감안, 신축이나 증축 등의 필요성 및 입지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시설 및 규모를 시·도지사가 결정토록 되어 있음.(국고보조사업 수행지침)

#### □ 질 문

- 시립공원묘지 및 시립납골당에 대한 대책은?

#### □ 답 변

- 우리 시 관내에 시립공원묘지 및 납골당 설치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설치가 불가하여 관계부서에 법령 개정을 수차 요구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이므로 동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관내 적지를 선정하여 매장에서 화장 및 납골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을 현대적 시설로 설치토록 적극 검토 시행하겠음.(약 270억 소요)
- 시립공원묘지는 지역 여건상 관내 설치가 어려워 타 시·군 지역에 설치를 위하여 충청권의 홍성·당진군과 수도권 시흥시·포천군 등의 후보지를 답사하였으나 주변 여건 및 지형이 적합하지 아니하고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 사단법인한국장묘연구회와 묘지관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바 동 연구회에서 수도권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 질 문

- 소사구 체육공원 건립 지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금년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할 방안은?

#### □ 답 변

- 소사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95년도에 계획되었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주들의 협의 불응 및 지적불부합 등의 사유로 96년도에 사업 추진이 보류되어 예산반납 조치되었던 사항으로서,

- 본 사업을 재 추진하기 위하여 98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 34억원 중 일단 협의가 가능한 토지부터 매입하기 위하여 15억원을 편성하여 토지소유주들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적불부합 등의 사유로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 특히 98년도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형편이 극도로 악화되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질 경우 계속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환경국>

### 박노설 의원

#### □ 질 문

- 부천시계에 근접해서 추진 건설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 서울시 강서구에서 추진중인 오폭동 소각시설, 인천시 계양구·부평구에서 추진중인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부천시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가?
  - 또한, 부천시에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가?
  - 이와 관련해서 종합환경평가를 실시, 추진할 의향은?

#### □ 답 변

- 서울시 강서구 오폭동 587-2번지에 건설되는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은 선정된 입지의 경계에 인접한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1998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강서구의 경우 개정된 법률시행 전에 입지선정이 이루어진 관계로 우리 시와 협의된 사항이 없음.
-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의 소각시설 건설사업은 2개 구의 광역화시설로 계양구 관내에 건설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현재 부평구에서는 본 사업에 관한 안전을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으며, 계양구에서는 2개 구 광역화시설 자체를 의회와 인근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부평구의 의견과 2개 구청 합동공청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 할 계획중에 있는 바 현재 입지선정, 건설규모, 제원 조달방법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우리 시에서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에 조치를 취할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의 소각시설 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 협의를 요청해 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처리할 계획이며,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서울시 강서자원회수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겠음.

-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에는 현재 1999년 4월까지의 용역기간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중에 있으므로 동 용역기간 내에 인천시의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인천시의 소각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도록 요구함으로써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 우리 시와 시민, 환경단체 등의 모든 의견을 서울시와 인천시측에 제시하고 동 의견이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임.

#### 장명진 의원

#### □ 질 문

- 여월천 수계 하수처리구역의 오수정화시설 편제 시기 및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 시설물 과태료 부과 이유 및 향후대책은?

#### □ 답 변

- 인천시와 통합으로 건설중인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60만톤/일) 건설공사는 95. 6. 30. 중동신시가 지 입주와 함께 1차로 15만톤/일 시설이 준공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2차로 45만톤/일 증설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공사진도는 90%로서 30만톤/일 시설이 완료되어 1일 처리능력은 45만톤임.
- 원종동 및 고강동지역 하수를 차집하는 여월천 및 고리울천수계 차집관거 시설공사의 총 연장은 7.0km로서 1차로 1.6km를 96. 10월에 착공, 97. 12말 완공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을 위하여 97. 11~98. 2월까지 여월천수계 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하였으며, 2차분 차집관거공사 5.4km는 97. 10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도는 20% 정도이며, 98. 6월까지의 관로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완료하여 여월천수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전량 처리코자 함.
- 또한 현재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 초과사항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치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월천 하수처리구역 중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97. 11월 이후부터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구역 중 차집관로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삼정천 0.9km 등의 차집관로 공사가 완료되는 98. 7월 이후부터는 역곡천 수계와 송내동 구지천으로 유입되는 지역을 제외한 부천시 전지역의 수질검사 등이 면제될 계획임.

임해규 의원

□ 질 문

- (가칭)인간도시 부천21 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지방정부, 기업이 동참하는 독립된 협의체 구성을 각계에 제안할 용의는?
- 부천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합할 용의는?

□ 답 변

- 우리 시에서는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서 납품한 부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획기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 우리 시는 구체적인 실천의 일환으로 97년말에 부천의제 21(가칭) 작성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총 망라된 추진협의회를 추진주체로 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79,800천원을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
-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시, 시의회, 민간단체, 종교단체, 일반시민, 사용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총 망라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부천의제 21(가칭)을 작성하도록 하겠음.
- (가칭)인간도시 부천21은 20 ~ 30년 정도 앞을 내다보는 비전을 제시하고 10년 기간의 장기목표, 5년 기간의 중기목표, 그리고 1~2년 기간의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단기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으로 부천시 5개년 발전계획과의 통합 추진여부는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음.

<건설교통국>

김광희 의원, 장명진 의원, 이영자 의원

□ 질 문

- 보도육교를 건설하면서 위치를 변경한 이유는?
- 중흥중학교 앞에 육교를 건설하면서 소방차 및 대형차가 학교에 진입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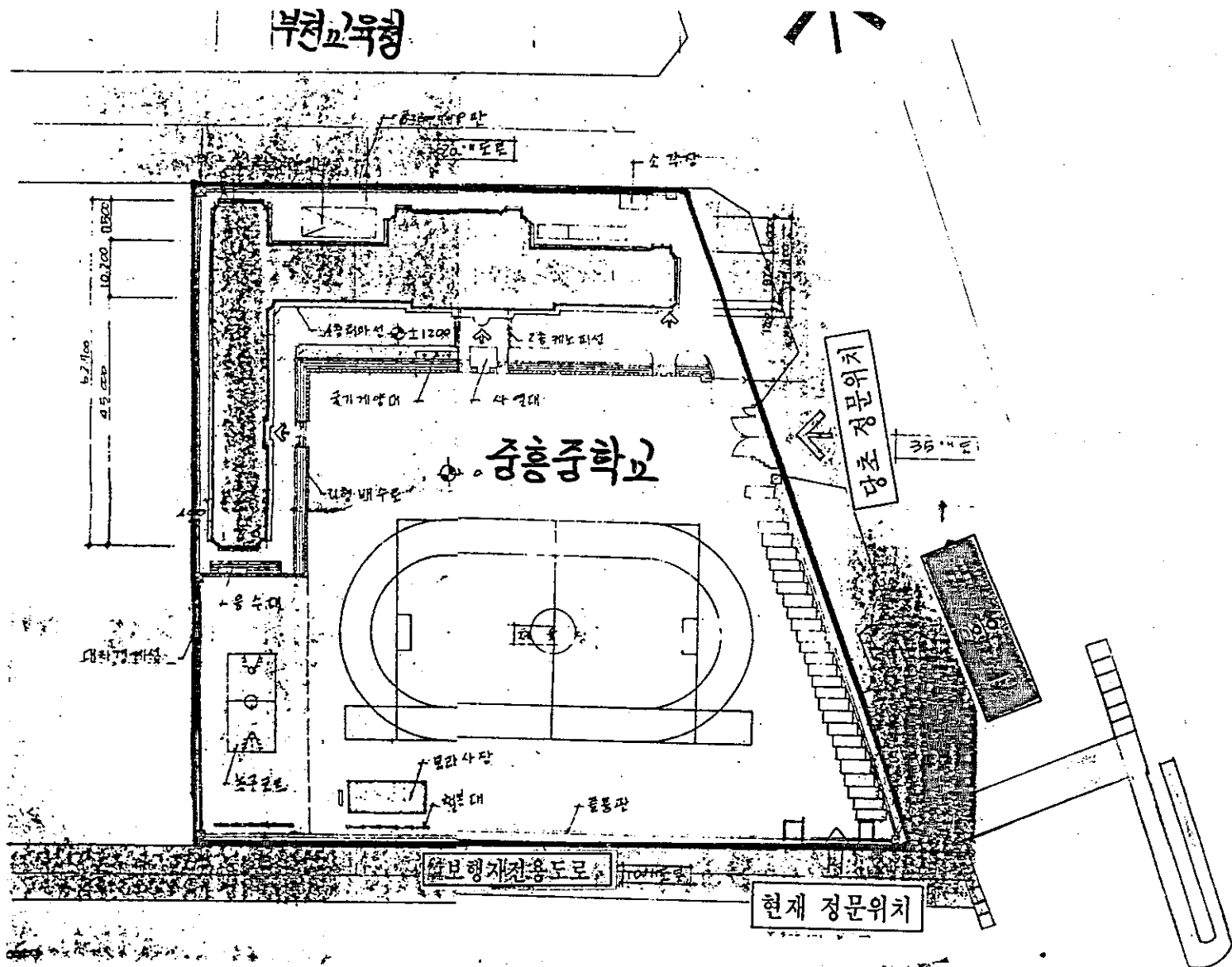
□ 답 변

- 보도육교 건설의 배경은 95년 부천시 시가지 교통운영개선사업(T.S.M) 기본계획 수립시 보행환경 개선 및 학교부근의 학생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 학생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 주는 스쿨존(School Zone)을 설정하여 필요한 시설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19개소에 육교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장 및 동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우선 부천북부역사거리외 3개소를 위치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하여 공사 착공하였으나 사생활 침해 및 주변 상인들이 생계위협을 이유로 육교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부득이 육교건설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음.
- 중흥중학교 앞 육교설치는 보행자 전용동선을 고려하여 최적 위치에 자전거 이용객과 장애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음.

그러나 91. 12 .20 중흥중학교 건축허가 협의 당시 본 학교 정문을 신흥로와 접하여 설치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나, 협의사항을 무시하고 현 위치인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하여 정문을 시설하므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부천중동 도시설계지침 제13조제4항 규정에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차량출입구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 동 학교 정문을 통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

다만 학교의 긴급사항발생시 육교하부공간을 이용하여 차량진출입이 가능토록 조치하겠음.

- 육교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향후 육교 가설시는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주변여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종길 의원, 장명진 의원

## □ 질 문

-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많은 기업주가 고민에 쌓여 있는데 그 대책, 기업 이주시 경제적 손실대책은 ?
- 역세권상세계획의 공장이전계획 재고 및 장기적 공단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

## □ 답 변

- 부천시의 장기개발 구상계획인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의 성장에 따라 송내동(2007년), 소사동(2002년)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두 지역의 준공업지역은 아파트, 인립 등 개발 압력이 대단히 많은 지역으로 그대로 방치시에는 향후 준공업지역은 무질서한 난개발로 도시의 슬럼화가 예상되어,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이 지역의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역세권 상세계획기법을 도입.
- 환경친화적이며 쾌적한 도시건설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상세계획을 수립 진행중에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조업의욕 상실 등 대책마련에 불안해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기업 활동도 보장되고 조업에 충실할 수도 있고 또한 IMF 시대의 어려운 지역경제에 밀받침이 되도록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된 상세계획기법에 의한 지침을 마련하여 최대한의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임.
- 또한 장기적 공단조성계획은 공항 및 오정대로 등 사통판달의 광역가로망과 상동영상단지계획 등 유리한 조건이 충분히 고려된 오동정 북측지역에 첨단·정보·통신·업무단지인 미디어밸리를 조성코자 하며, 이와 연계하여 오정동지역의 부족한 공공 및 문화복지시설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98년 3월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98년 4월~6월까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8년 8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신청 금년 내 마무리 하고자 노력중에 있음.

## 강문식 의원

## □ 질 문

-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불편이 가

중되고 있음.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 대책은 ?

□ 답 변

- 공사의 설계변경은 지하매설물 등의 발생, 시민불편 사항 추가시공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설계 당시부터 자료조사 수집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오명근 의원

□ 질 문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으며 입주민이 임차인이라 하여 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계도서가 비치되지 않은 이유와 분양전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 반달마을 임대아파트 임대조건 중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선택 3안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에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조정 권고하였으며, 선택 3안이 임대주택법에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와 제계약 행위가 주민들에게 불평등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과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 답 변

- 부천시 장기임대주택은 총 5,603세대로 금번에 미라네마을 1,540세대, 반달마을 2,742세대가 분양전환 대상에 해당됨.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분양전환과 관련한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 임대분양전환에 따른 준비권고를 사업주체 및 입주민대표에게 통보하였으며, 반달마을 건영 임대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분양전환이 불가함에 따라 (주)건영 및 채권자인 삼삼중금(영업정지중)에 4차례에 걸쳐 서면 해제 요구와 수차례에 걸친 전화요청을 한 바 있고, 분양전환 이전에 주택소유여부의 전산검색의뢰, 감정평가사 조기선정 의뢰, 타 시 분양전환 사례 파악, 입주민의 요구에 의한 구조상 안전성 여부를 위한 강도측정, 사업 주체에 설계도서 조기 인계 요청, 관계자회의 등을 통하여 입주민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분양전환에 따른 준비에 최선을 기하고 있음.

- 임대아파트는 개인소유가 아닌 사업주체 소유물로서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설계도서 인계 의무는 없으나, 그 동안 입주민의 계속되는 도면 요구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사업주체에 도면을 인계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한 바, 건영의 경우는 토목도면을 제외한 관련 설계도면이 인계 완료되었고 선경·동아의 경우는 시공시 사용하던 도면을 기이 사용중으로 현 도면이 낡은 상태인 바, 건영의 토목도면은 설계사무소 및 사업주체의 관계자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으며, 선경·동아의 경우도 새로운 도면으로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 노력하겠음.
- 분양전환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분양전환 기일인 98. 4. 1 이후 사업주체가 매각계획서를 제출 시 입주민의 분양대책위원회와 조정권고 등을 통하여 협의 하겠으며 그 동안 선경·동아·건영 분양대책위원회가 각각 활동하여 왔으나 1998. 3. 10일 이후부터는 합동분양대책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입주민이 요구시 우리 시와 수시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음.
- 반달마을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였으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선택 3안의 적법여부·재계약 행위의 불평등계약 여부에 대하여는 분양가 등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전규정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최초분양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협의사항으로 관계규정에 적법한 사항이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입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장명진 의원

#### □ 질 문

- 체비지 사용료를 상업지역과 일반지역을 같게 책정토록 조례제정 용의는 ?

#### □ 답 변

- 체비지 대부료는 그 토지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면적에 대부료 요율을 적용 하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 비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50을 적용 산출하고 있음.
-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명시된 대부요율을 주거용, 비주거용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대부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관련법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음.

#### 전만기 의원

□ 질 문

-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 사업계획서 제출안내 공고 후 추진현황과 시의회 진행사항을 알리지 않는 이유?
  - 이후 추진계획과 IMF 이후 본 사업에 대한 전망은?

□ 답 변

-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안내 공고 후 그 동안 추진된 사항은 98. 1. 15. 나산종합건설(주) 외 4개 회사와 부천지하상가(주) 외 2개 회사가 각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접수와 동시 접수된 사항을 우선 건설교통위원장께 구두 통보하였으며 제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시 접수된 회사와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눈 바 있음.
- 그 이후에 의회에 진행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한 것은 현재 전문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어 확실하게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임.
- 전문평가위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와 협의하여 시기 등을 조정 추진하겠으며 가능한한 3월중에 평가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음.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 사태 이후 여건이 변화되어 민간자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임.

류재구 의원

□ 질 문

- 자동차등록사업소의 등록업무에 대한 폐해가 심하다.  
이용자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

□ 답 변

- 자동차 등록은 신청종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 민원인들이 등록 신청시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어 차량등록 민원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A.R.S 운영으로 자동차 등록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음.
- 민원부조리발생 예방대책으로는 대행업체 사무원이 신청시에도 등록처리한 것을 97. 8. 25.부터 부천시에 등록된 행정사가 직접 신청시에만 등록처리하고 있어 폐해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자동차 등록신청시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자동차등록 원부에 압류, 지당설정, 법원가처분, 경매 등인 경우에 이진 또는 폐차말소신청이 불가하여 해제·말소 등 처리절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인의 불만과 불평이 발생되고 있으며,
- 이전등록은 압류 지당설정이 된 경우라도 양수인이 압류사항을 승계받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재확인하여 등록처리가 가능함.
- 자동차 폐차말소는 폐차 후 폐차업자가 발급하는 폐차증명서를 지참 등록관청에 30일 이내에 말소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리절차 등 지식 부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건설교통부에서 보완 검토중에 있음.
-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는 임대건물로 전체 81.2평 중 민원실은 15평으로 협소하나 1일 평균 600여명이 출입하고 있어 매우 비좁은 상태임. 추후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되면 무료대서 등 민원편익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음.

#### □ 질 문

- 이용하기 어려운 체비지를 일제 정리하여 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답 변

- 체비지의 관리 현황은 전체 212필지 중 일반점유 115필지, 공공점유 51필지, 임시주차장 환용 18필지, 공지 28필지임.
- 공지 28필지는 소규모의 민적을 가진 토지와 1필지 건축면적 협소 및 토지형상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인근 토지주에게 매수토록 권고 및 소규모 형태로 도심속 녹지공간 등으로 활용 계획임.

김삼중 의원

#### □ 질 문

- 민자역사 현황과 부천북진화국 공사와 그 주변 민원발생 사유와 그 사후 대책은?

#### □ 답 변

- 부천민자역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치는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316-2 외 10필지이며, 대지면적은 30,976㎡(9,370평), 건축면적은

20,231㎡(6,120평), 연면적 63,330㎡(19,157평)으로서 지하2층, 지상9층 규모로 용도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역사)임.

- 현 시공내역은 3단계로 나누어 시공중에 있고 1, 2단계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외부공사중에 있으며, 3단계는 3층 골조시공중으로 현재 공정은 약 60%로서 공사완료 예정일은 98. 12월 말임.
- 다음은 부천북전화국 공사와 관련 민원발생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사중인 전화국의 현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17번지이며, 대지면적은 4,184㎡(1,265평), 건축면적은 724㎡(219평), 연면적은 5,403㎡(1,637평)으로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용도는 통신시설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발주하여 (주)풍한기업에서 시공하던 중 98. 1. 9일 시공회사의 부도로 범진산업(주)으로 시공자를 변경하여 공사중에 있음.
- 민원발생 사유는 공사장의 지반이 암반층으로서 당초 시공회사인 풍한기업(주)에서 지하 터파기를 일반적인 공법인 뿌레카(착압기)를 이용하여 터파기를 하던중 인근주민(도당동118-1 우정빌라 나동102호 박상진 외 23세대)으로부터 소음, 분진 및 건축물 균열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소음, 분진 및 진동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전기에너지로 암반을 파쇄하는 프라즈마공법으로 변경 시공중에 있음.
- 민원 사후대책에 대한 피해보상은 98. 3.10. 현재 우정빌라 4동 24세대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간에 구두 합의 완료하였으며,
-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 질 문

- 주거풍치 해제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 상황 및 향후 세부실천 계획은?

#### □ 답 변

- 풍치지구 해제 추진사항은 제57회 정기회에서도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시에서는 목적이 상실된 풍치지구 해제를 위해 바람직한 도시관리지침을 작성코자 97. 6. 25일 풍치지구 해제를 위한 정비기본계획용역을 시작, 현재 5차의 중간보고를 거쳐 마무리된 (안)을 금번 회기중인 3월 12일 의회에 보고, 3월 26일 예정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6월경 결정권자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우리 시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근 의원

## □ 질 문

- 신도시 내의 하자보수 종결 사업주체 총 건수, 마을·동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 임대주택에는 임차인 대표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스스로 구성한 임의단체인 주민대표가 시공자인 임대주택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의단체인 임차인 대표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가요?

## □ 답 변

- 우리 시 신도시 분양아파트는 93. 2. 27부터 최근 96. 12월까지 총 43개 단지 482동 40,409세대가 건설되어, 하자보수기간인 3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33개 단지 337동으로 하자보수 종결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의하여 현재 하자보수를 진행중에 있으며, 은하마을 대우·동부아파트, 미리내 롯데아파트, 복사골 건영아파트, 그린타운 금호·한양아파트 등은 하자보수 완료 합의를 작성 합의내용을 이행중에 있으며, 사업주체 부도로 포도마을 뉴서울아파트, 반달마을 삼익아파트는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인출하여 하자 종결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신도시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하자사항 및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하자보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음.
-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에서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토록 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에서 하자예치금 적용이 배제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불법행위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료됨.

이영자 의원

## □ 질 문

- 오정구 고강동지역(오쇠리)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한 집단민원 해결방안은?
  - 고강동지역 거주 주민이주대책에 따른 작동이주단지 분양을 못 받은 결격자에 대한 대책은
  - 기이 분양화정된 피해주민에 대한 택지분양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확실한 분양 시기는?

## □ 답 변

- 작동이주택지 분양대상자 선정은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천시간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공특법과 개발제한구역행위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98. 2. 2. 제1차 택지분양예정자 268명을 부천시로 통보하였으며, 선정되지 못한 이주자는 현재 주

민대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중에 있어 앞으로 동 위원회의 추이와 또한 부천시에서 관계기관 회의 시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는 이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음.

- 이주택지 분양지연은 이주대책위원회에서 공동용지 확보 및 택지면적 조정관계로 지연되었으며 택지분양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제1차 선정된 268명에 대하여는 98. 3월 중에 분양토록하겠음.

□ 질 문

- 오정구청사 신축공사 추진현황은?  
- 오정구청사 신축공사가 토지매입보상이 완료되고 98. 7. 1 착공 예정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달라.

□ 답 변

- 오정구 신축현황은?  
위 치 : 오정구 오정동 129번지 일원  
부지면적 : 5,026평  
연 면 적 : 6,790평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  
총사업비 : 38,100백만원  
사업기간 95.~2000. 11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 96. 5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96. 11 대형공사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 건교부)  
97. 2 토지보상제결 및 매수협약 완료  
97. 7 입찰안내서 경기도 기술심의  
97. 10 설계 및 시공 발주의뢰(조달청)  
97. 10 설계시공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신청  
98. 1 입찰서 및 기본계획설계도서 제출(조달청)하였으며 입찰서 및 기본계획설계도서의 경기도 지방기술심의회 심의 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도서작성 심의 후 낙찰자 및 감리자를 선정하여 98. 9월 착공 2000. 11 공사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IMF 체제하에서의 지방재정여건상 세입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자체판단되고, 지방행정 구조개편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추후 지방재정여건과 지방행정구조개편 결과를 보아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 한윤식 의원

## □ 질 문

- 소사구 송내1동 반도기계 주변 달동네 개발에 대하여는?

## □ 답 변

- 소사구 송내1동 반도기계 주변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재개발 및 재건축은 어려운 실정이며
- 우리 시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밀 검토하여 지구지정이 가능한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lt;상수도사업소&gt;

## 강문식 의원

## □ 질 문

- 수도계량기의 원활한 검침과 검침의 신뢰확보를 위한 수도계량기 자동검침을 도입할 의향은?

## □ 답 변

- 수도계량기의 자동검침은 검침원이 직접 수용가를 방문하지 않고 수도계량기에 센서 등을 부착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검침하는 방법과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컴퓨터 통신망과 연결하여 검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중인 지역이 없으며 한국통신공사에 확인하여 본 결과 전화선을 통한 원격자동검침사업은 설비투자비의 과다 소요와 경제성이 없어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사업이며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 연구대상으로 판단됨.

## &lt;공영개발사업소&gt;

## 전덕생 의원

## □ 질 문

- 중동신도시 미매각 용지에 대한 현실가능한 매각계획은 무엇이며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투자

사업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한 제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입니까?

□ 답 변

- 현재의 매매각 잔여 상업용지는 87필지 2932억원이며, 대부분이 20억원대 이상의 필지규모가 큰 중심상업용지로서, 중동지구 도시설계지침상 용지의 분할과 용도변경이 불가할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및 IMF체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 등으로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며,
- 향후 지속적인 토지매각 노력을 다하는 한편,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경량전철건설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처리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중동신시가지 조성 개발이익금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은 94년 기준으로 부천시 부담금이 3381억원이나 97. 12월 현재 기준으로 1153억원이 가이 확보 및 투자된 사업이고 향후 2228억원이 추가 소요되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현재 매각대상 토지대금이 3286억원으로, 현시점에서 향후 추진할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정확한 소요사업비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토지매각 진척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매각대상 토지대금 범위 내에서 사업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질 문

- 부천시·주공·토공의 중동신도시 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을 주공·토공이 42% (27.2%, 14.8%)의 개발이익금을 부담키로 협약되어 있으나 택지개발 현황을 비교하면 주공(727,000평·44%), 토공(367,000평·22.4%) 도합 66.4%이고 부천시는(555,000평·33.6%)에 불과한데 상대적으로 주공·토공의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부담비율이 부천시보다 적은 이유는?

□ 답 변

- 중동택지개발사업의 각 기관별 시행면적 대비 개발이익금 부담비율 산정에 있어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큰 이유로서는 각 사업시행 주체별 매각대상 토지는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우리 시가 326,147평, 주택공사 437,499평, 토지공사 222,054평으로 총 985,700평이며 토지이용계획상 주택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의 배분구성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업용지는 172,000평 중 69,900평으로 4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반면에 상업용지는 지가가 높아 개발이익금은 우리 시가 373,074백만원, 주택공사 175,210백만원, 토지공사 98,841백만원으로서 총 개발이익금은 643,125백만원이며, 우리 시는 58%의 개발이익이 발생되어 신시가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타 기관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 질 문**

- 부천시 부담금 문제로 경인복복선 및 역사공사가 지연되는 데 대한 시의 대책은?

**□ 답 변**

- 경인복복선 부담금은 94. 1. 21 협약체결되어 우리 시에서는 290억원을 부담하기 위해 6회에 걸쳐 예산승인을 요청한 바 있으나 부담형편의 부담성이 제기되어 철도청에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철도청에서는 98년도 예산서상에 부천시 부담금 290억원 이외에는 편성된 예산이 전무하여 98. 12월말 준공이 불투명한 여건에 처하여 있음.
- 98. 3. 10 철도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중합추진 공정은 90%이며, 역사 건축부분(역곡, 중동, 송내) 공정율은 70%로서 97. 12. 31까지 확보된 사업비 소진에 따라 일부 궤도부설과 신호시설 공중에 대하여만 시공중에 있으며, 역사공사는 중단된 상태로써 부담금 완납 이전에는 잔여공사에 대한 공사계약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으며, 특히 역사완공이 늦어질 경우 전철운영이 여유롭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부담금 납부를 요망 하고 있는 바, 부담금 납부결정이 이루어져 원만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의원**

**□ 질 문**

-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공동주택은 하자보수 3년 만기일 하자종결 처리를 하였다면 앞으로 시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대책과 수선비용 부담 및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지?

**□ 답 변**

- 우리 시에서 무주택 서민 및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사업을 추진한 복사골 시영아파트는 92. 12. 5.자로 준공되어 94. 12. 4.까지 2년 간 하자보수기간이었으나 이 기간중 94. 1. 19. 이

후 총 13회에 걸쳐 하자보수 신청이 있어 시공사인 (주)건영이 직접 옥상방수 등 하자보수가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고, 본 보수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종결 처리할 계획이며 그 후 하자 재발 생시에는 법적 하자보수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입주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따라서 시에서는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치 않음.

## <청소사업소>

박노설 의원

### □ 질 문

○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에 대해

- 음식물 사료화시설 추진경위와 어떠한 시설로 검토 계획중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가, 관계자, 시민들이 참여 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 지난해 인하대에 발주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에 관한 보고서가 지난 1월에 부천시에 제출되었는데 이를 도입할 용의는?
- 공사는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대장동 주민들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또한 민원문제는 없는가?
- 중동소각장의 항구대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 일정은?

### □ 답 변

○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음식물 사료화설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96. 1.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작성 환경부에 제출한 바 환경부에서는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시범실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건설·운영중인 광주 광산구, 울산시 중구, 의왕시 등의 사료화 및 퇴비화시설을 비교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는 광산구의 사료화시설이 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의 시설을 건식사료화 시스템으로 수립하고 동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 환경부에서는 우리 시의 시설을 시범시설로 선정하고 국·도비 지원이 결정되어 동 사업을 97. 9. 5일 착공하게 되었음.

참고로 동 시설은 97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된 사항임.

현재 진행중인 음식물 사료화 설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부형제의 과다 사용임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아울러 인하대에서 연구용역한 기술사항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검토 분석하여 동 시설에 대한 공사공정이 99년 7월로 되어 있는 것을 2000년 7월까지 연기 하여 가장 최적의 시스템으로 추진하고자 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공사의 진척은 98. 3. 10 현재 전체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공사내용은 건축공사에 따른 터파기 및 파일항타작업이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음.

아울러 주민 이해와 협조로 동 시설 내 주민 보상문제는 98. 3. 1 현재로 완료되어 이 문제와 관련된 민원은 없음.

- 중동소각장 다이옥신 항구대책과 관련된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 일정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98. 1. 6. 환경부 소각시설기술자문단의 기술검토를 받아 황성탄 분무시설, 백필터 및 SCR촉매탑 등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공사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수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98. 3월중 공사를 발주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 □ 질 문

- 쓰레기 수거체계개선과 재계약에 있어 도급제와 대행제의 이원적인 쓰레기 수거체계를 일원화 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쓰레기처리비 지급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 또한 (주)위생공사의 인원과 장비를 기준한 도급비 산출방식을 쓰레기처리량에 의해 지급하여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지 여부?

#### □ 답 빈

-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처리 개선계획 목표년도를 대장동 종합폐기물시설이 완공되는 2000년 하반기에 두고 추진중에 있으며 그 이전에도 재활용품 선별시스템건설, 쓰레기중계처리시설, 음식물 사료화시설이 부분적으로 완공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수거체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0년도에는 우리 시 발생 생활쓰레기의 자체 소각처리가 가능하므로 수도권매립지까지의 운송단계가 단축되고 재활용체계의 변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쓰레기의 적화방법 변경 등 청소체계 변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목표하는 지역청소책임제의 개선을 위해서 (주)위생공사의 인력 및 차량 감축을 지난 96년 1월부터 추진하여 97년도에 인력 25명, 차량 10대를 이미 감축하였고, 98년도에는 인력 20명과, 차량 5대를 감축하였음.

앞으로 99년~2000년도까지는 인력 60명과 차량 17대를 감축, 예산을 전감하고 계약기간중이라

도 청소시책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새로운 시책에 맞는 제계약을 체결 운영해 나갈 것임.  
다음 부천시 일반폐기물의 효율적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연구보고에 대한 질문사항은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 질 문

- 쓰레기 종량제봉투 속에 이중, 삼중으로 비려지는 일반 비닐봉투로 인하여 자원낭비와 토질오염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 답 변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일반 비닐봉투에 이중, 삼중으로 담아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것이 현실이나, 이에 대한 시정방안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운동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대시민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사용중인 규격봉투로 인하여 유발되고 있는 토질오염에 대처하고자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규격봉투(합성수지 성분) 대신에 생분해수지 30%를 첨가한 썩는 쓰레기 봉투로 대체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현재 서울 일부지역 및 경기도 양평군을 시범 실시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순영 의원

□ 질 문

- 97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5대가 시범단지를 정하여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 98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가 시범단지에 설치 될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99년부터는 김포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 열병합발전소에서는 1998년 1월부터 난방비를 인상하였는데 부천시가 소각장을 통해 열병합발전소로 공급하는 가격은 얼마나 인상하기로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만약 아직 인상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 □ 답      번

- 우리 시에서는 97년 11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시범보급 계획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기종 5대를 선정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각 기종에 대한 성능 비교와 주민들의 만족도 및 사용중 도출되는 문제점을 검토한 바 기기 설치한 5개 기종은 모두 80% 이상의 쓰레기 감량효과를 가져왔음.

다만 일부 기종은 경유를 사용함에 따라 유가 인상에 따른 소요비용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음.

- 98년 사업은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97년도 청소행정분야 최우수 시로 선정됨에 대한 상사업비 2억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코자 현재 장소를 선정중에 있음.
- 99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중지 사항은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공동주택(APT)단지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업소 747개소에 대해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적극 추진코자 현재 극동두산아파트 516세대는 진돌농산, 신동아영남아파트 640세대와, 삼환한진아파트 781세대는 남양농장과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3월 23일부터 위탁처리에 들어가며, 감량화 의무 업소 중 205개소도 기기처리 및 양돈농가와 연계 위탁처리 중에 있음.

아울러 전시민 음식물쓰레기 감량운동은 물론 단독주택 지역은 음식물쓰레기를 말려서 내보내기를 적극 홍보하고 2차적으로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내에 건설중인 고성능 압축기로 물기를 제거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동시설에 추진하고 있는 1일 5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중동소각시설의 1일 처리용량은 200톤 규모로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열은 인근 지역난방공사로 판매키로 우리 시와 난방공사가 95. 6. 17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단가조정을 하므로 97. 4/4분기에 1Gcal당 6,143원에 판매하였고, 98. 1/4분기에는 1Gcal당 7,330원에 판매하고 있어 97년 4/4분기 대비 16.1% 인상된 금액으로 이미 판매하고 있음.

#### <소사구청>

임해규 의원

□ 질 문

- 공공성을 띤 소향관을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
- 소향관을 무료의 공용시설에서 유료의 공공시설로 전환할 용의는?

□ 답 변

- 지난 임시회의시 김만수 의원님과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적극 검토사항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소향관 운영은 저소득층이나 공공성을 띠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임.
- 96. 9월 개청 이래 교육, 연주회, 발표회, 청소년어울마당 등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민, 단체 누구나 신청하면 무료로 개방시켜 88회 20,980명이 이용하였음.
- 아울러 소향관은 시민회관이나 노동복지회관처럼 별도의 건물이 아닌 공용청사의 부속건물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운영상태가 청사 부속건물로서의 재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소향관을 유료의 공공시설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현재에도 공공시설인 시민회관 대·소공연장으로 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므로
- 추후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이 시민의 이용 수요증가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 유료화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따라서 소향관은 공공성이 있고 영리목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행사는 누구에게나 개방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 그야말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음.